

영광원전 부실시공·은폐의혹 규명 나선다

더민주 신재생에너지 육성 TF, 18일 현장조사 산자부, 주민불안 해소 '안전성 확보 대책' 발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불거진 원전 부실시공 의혹과 설비 결함 규명을 위해 영광 한빛원전을 찾는다. 민주당 산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탈원전)의 출발은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라는 전제에 따라 이날 당정이 협의한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영광 한빛원전을 찾는 이유는 나머지 4개 원전과 비교해 설비 결함 장과 결함이 자주 터져나오면서 주민 불안과 불만이 커진 탓이다.

한빛원전 3, 4호기의 경우 격납건물(동모형의 1m두께 콘크리트 방호벽) 곳곳에 빈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데다, 4호기의 경우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쇠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됐고, 최근에는 원전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또는 고농도 핵폐기물) 보관건물에서도 부실시공의 흔적이 드러났다.

특히 원전 사고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격납건물의 빈틈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불량량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광주일보 취재 결과(2017년 8월 2일자 1면) 37년 전 발전소 건설 당시부터 부실시공을 폭로하는 건설업체 근로자들의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TF 중 하나인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TF(이하 에너지전환TF)'가 오는 18일 영광 한빛원전을 찾아 현장 조사를 나선다.

이번 조사에는 단장을 맡고 있는 박재호 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 이기호 의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하·김성수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좌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공무원,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날 조사단은 원전 운영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격납건물 철만 부식 및 콘크리트 부실시공 ▲증기발생기 이물질 유입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며, 문제의 원인과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들은 을 청취한 뒤, 증거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 등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는 그동안 정치권과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부실시공 전면조사 등을 포함한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전환 TF 관계자는 "에너지전환(탈원전)의 시작은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그 출발점이다"면서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박재호 단장 역시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하는 것이 에너지전환의 시작"이라며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한빛원전 4호기에서 건물 내부 철만 부식과 콘크리트 구멍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한빛원전을 포함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건설된 원전에 대해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장관은 당시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백 장관은 "유사한 공법으로 건설된 원전이 10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3기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 중이며, 7기에 대해서는 가을이 오면 전수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에너지신산업 메카 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

전문가 참여 연말까지 추진

광주시는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 메카 육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9월초부터 4개월간 전남대 산학협력단 배정환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에너지밸리기술원 등 에너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립될 예정이다.

클러스터는 빛가람 공동혁신도시와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총 330만㎡를 산업용지, 교육용지, 연구용지로 구분해 조성될 계획이다. 산업용지(100만㎡)는 경쟁력 있는 에너지기업을 유치해 기업 간 상호작용을 통해 기술개발, 인적 정보교류 등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타점을 마련하고, 교육용지(130만㎡)에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를 융합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대학

(원) 등을 설립한다. 연구용지(100만㎡)는 초정 연구단지, 일반 연구단지, 연구지원단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클러스터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에너지밸리의 확장성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변환,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체와 산학연이 선순환구조의 산업 집약체 조성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1월 중앙부처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신청하고 부처 예비타당성 용역 및 기술평가, 2019년 기제부 승인을 거쳐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클러스터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면 공동혁신도시와 도청산단을 잇는 에너지밸리 벨트의 핵심축이 마련된다"며 "최고 수준의 인재양성, 연구개발, 기업유치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메카' 완결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14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서 '시민참여 민주주의' 가능성 찾는다

17일까지 세계인권도시 포럼

광주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불씨를 찾는 작업이 진행된다.

광주시는 14일부터 17일까지 3일 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7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DJ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안톤 살만 팔레스타인 베를레헴 시장, 마우리시오 발리엔테 스페인 마드리드 부시장, 치토 개스콘 필리핀 국가인권위원장, 바실 페르

난도 전 아시아인권위원장 등 지방 자치단체장과 국제적 인권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오프닝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스페인 마드리드 마우리시오 부시장이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를 비롯한 시의 인권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디사이드 마드리드는 16세 이상 마드리드 시민이면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제안된 정책 중 마드리드 시민 2%가 동의하면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시의회에서 표결에 부치는 방식이다.

2015년 9월 출범 이후 2개월 만에 4000여 개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는 1만2000여 개를 통과했다. 특히 이 플랫폼은 마드리드를 넘어 바르셀로나 등 스페인 내 20여 개 다른 도시로 확산되는 등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대안으로 안착했다.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 참여 확대를 꾀해온 시는 이번 인권도시포럼을 통해 시민참여 민주주의 가능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광주형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마련하고 있는 시는 16일 오전 9시 김대중컨벤션센터

터 214호에서 열리는 '주제회의 5'에서 '민주주의와 마을'을 주제로 플뿌리 기반의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더불어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한 광주포럼에서는 인권도시 광주에서의 '민주주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토 미구엘 아라나 카타니아 스페인 마드리드 디지털전략 디렉터가 '스페인 마드리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이진순 와글(WAGL : We-All-Govern Lab) 대표가 '플뿌리 기반의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모델'에 대해 발표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산구, 광주시 상대 소송 패소

재난기금 부적정 사용 징계 요구 각하

광주시의 '재난기금 부적정 사용 징계 요구' 처분과 관련 시를 상대로 광산구가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14일 광산구가 윤장현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기관경고 등 감사결과 처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초 교육청

소관 업무이자 재난기금 사용 대상이 아닌 학교 우레탄 철거에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며 광산구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구청장과 구청에는 경고 처분했다.

광산구는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으며 비유나 부패 사안도 아닌데 시가 무리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광산구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편 광산구가 "감사관이 징계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며 광주시 감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시 복지정책·청년일자리 행자부 고객체감 최고점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청년일자리 사업 등이 행정자치부 고객체감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시는 14일 "행정자치부 고객체감도 조사 결과 1개 중점과제 3개 시책 중 2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전반적 만족도가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017년(2016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하나로 지난 4월 3일부터 12일 간 고객 체감도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시의 종합 체감도는 51.8점으로 세종(51.4점), 대구(51.0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

석됐다. 인천(49.9점), 서울(49.2점), 부산(49.1점), 대전(48.8점), 울산(46.7점) 등보다도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역복지기반 확충(복지정책 효율화 기반 조성, 복지허브화 추진) ▲일자리 창출(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창조경제 추진, 취약계층 취업지원) ▲재난안전 및 대기질 개선(재난 및 감염병 대응, 대기질 개선) 등 3대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주시는 지역복지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등 2개 부문에서 각각 55.6점과 50.5점을 받아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제17회
곡성·심청축제

THE 17TH GOKSEONG SIMCHEONG FESTIVAL

2017. 10. 6(금) - 9(월) 4일간 곡성심진강기차마을

축제주요행사 가족사랑가요제 | 남진 단독콘서트 | 심청시집가는 행렬 | 전통혼례식 | 구곡수업 100세 공동문화행사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 흑백사진관 | 프린지 공연(폼바, 마당극, 코미디 퍼포먼스) | 가족 명랑운동회 | 심청카페

www.gokseong.go.kr/tour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
안내·문의 (061)360-8252

와 함께 열거는
행복한 세상